

# 보도자료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보건복지 이슈애포커스 제464호 발간 - 신청주의 논쟁의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		
상세문의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이현주 선임연구위원	☎044-287-8200
	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	권성희 전문원	☎044-287-8282
배포부서	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장	이혜선	☎044-287-8345
	연구기획조정실 미디어홍보팀	정지혜 행정원	☎044-287-8015
분 량	총 3매(표 1종 포함)		
배포일시	2026년 4월 20일(월)		
보도일시	즉시		

## 신청주의 논쟁 꼼꼼하게 살펴보기

- 신청주의 논쟁의 주요 쟁점들
  - ▲ 신청 절차가 사회보장 사각지대, 비수급이나 수급 누락의 원인인가?
  - ▲ 신청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청 절차는 폐기하는 것이 답인가?
  - ▲ 필요한 정보의 확보 가능성 등 행정 인프라를 고려할 때 신청 절차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
- 신청주의 논쟁이 신청 절차의 성급한 폐기로 이어지기보다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원인, 수급 누락의 원인 파악과 대응 계기가 되어야 할 것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이 글은 김기태, 강신욱, 김태완, 노대명, 이현주, 함영진, 김성아, 이원진, 임덕영, 임완섭, 정은희, 오성재, 이다미, 이주미, 최준영. (2025).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요약·보완·재정리한 것입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애포커스』 제464호 ‘신청주의 논쟁의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 연구책임자는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이다.

※ 신청주의: 법적·행정적 처리와 결정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은 “이 글은 최근 사회적 논쟁으로 부상한 신청주의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 운영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이슈애포커스에서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하반기 신청주의 논쟁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되었으며, 해당 발언이 신청주의가 생계형 사건·사고와 사회보장제도 비수급 문제의 원인인지, 자동 지급 도입이 가능한지 등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 이 글에서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은 신청 절차 자체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 생계형 사건·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존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간병·의료비 부담, 정신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났다. (표1)
  - 인용한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분석 결과에서도, 2016~2021년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은 비율은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신청주의 관련 사망사건 개요

	송파 세 모녀 사건	대구 부자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익산 모녀 사건
시기 및 유형	2014년 / 자살	2021년 / 간병 방치	2022년 / 자살	2025년 / 사인 불명 및 자살
발생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 제도 기준 질병·의료비 부담 채무·신용불량 상해와 소득단절	간병 부담 고액 의료비 부담 공과금 체납 사회적 고립	부채·추심 전입신고 회피 가족의 질병과 사망 정신적 어려움	질환, 정신적 질환취업으로 인한 수급 중단 제도 기준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 의료비 부담

출처: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김기태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2의 〈표 2-10〉을 재구성.

- 사회보장제도 미신청 및 비수급의 주요 원인은 신청 절차의 복잡성보다 제도 기준과 정보 인지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연구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의 미신청 이유로는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가 19.3%로 가장 높았으며, ‘제도를 잘 몰라서’는 1.9%, ‘신청 절차 및 선정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는 1.3%로 나타났다.
  - 이 글에서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은 미신청과 수급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제도의 엄격한 기준, 제도 인지의 어려움과 인지 부족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신청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권리 실현과 행정 책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 신청은 행정청에 권리와 관련된 처분을 요구하고 권리 실현을 요청하는 절차로, 신청 이후 누락·지연·과오지급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 또한 국민이 제도를 인지하고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정책 이해와 제도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은 “신청주의 논쟁이 신청 절차의 성급한 폐기로 이어지기보다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수급 누락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슈앤티포커스 제464호 원문 보기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503>